

정부,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 추진

켄텍·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전력 공기업 등과 협약 체결
3210억원 투입 '지산지소' 분산형 전력망 구축 본격
2030년까지 ESS 85기 구축...지역단위 배전망 연결

정부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전력 공기업, 민간 기업 등과 함께 '케이-그리드(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열고 "약 32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역 생산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른 광역시·도로 보내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다.
먼저 지역 단위 배전망을 고도화한다. 태양광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적극 수용하고 변동성을 완화해 계통 안정성을 높여준다. 배전망 포화로 태양광 접속 대기가 심각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보급해 추가 접속을 유도한다.
기후부는 올해 20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85기의 ESS를 배전망에 구축한다. 구축이 완료되면 약 485MW 규모 태양광 추가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햇빛소득마을을 활성화할 위한 소규모 ESS 보급도 병행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올해 배전망 ESS 구축에는 1176억원, 햇빛소득마을 ESS 구축에는 984억원의 국비가 각각 투입된다.
농공단지외의 대학가 등 배전망에 접속된 중소형 부하를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도 구축한다.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활용해 수요를 평탄화하고 배전망 전력 부하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마이크로그리드가 구축되면 태양광 추가 접속 등 배전망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력수요 입찰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이 남아 가격이 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옌보

려가면 난방이나 전기가 충전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주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 분산형 전력망에 적합한 시장제도도 도입한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 전력망 투자는 2030년 3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 세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에너지 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전력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케이-그리드(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195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한편 기후부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전·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과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한국에너지공단·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서울대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각각 맺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광양만권 K-배터리 원료 중심 육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대응 역량 집중
원료 확보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생태계 구현 전략 구체화

전남도가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계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생산 규모를 넘어 원료·핵심 공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으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원료 거점'으로 키우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은 원료·소재 산업 기반, 항만·물류 인프라, 산업단지 집적 등 공급망 관점의 강점을 갖춘 지역으로,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

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공모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실행가능성(인프라·투자·인력·거버넌스)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원료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한 권역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공모 신청서에 담아 유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유치 전략을 다듬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 국회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열어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

다. 포럼에서 제시된 제안을 바탕으로 공모 신청서를 보완하고, 발표평가(PT·예상 질의응답 등)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화단지 경쟁력의 또 다른 축인 인재 기반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광주·전남권 10개 대학과 '이차전지 전문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했다.
대학의 교육·실습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취업'으로 이어지는 인력 파이프라인을 체계화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수의 해양용 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광양의 차세대 이차전지 원료

(핵심소재) 검증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지원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표준화와 원료 분석·평가 등 원스톱 검증 체계가 갖춰지면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오는 27일까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발표평가 대비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광양만권의 기반과 지역 역량을 모아 기업에는 안정적 공급망 환경을,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기회를 만들 특화단지 유치를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상호관세 부과 위법 美대법 판결 청와대, 美 대응 살피며 '신중모드'

동향 파악·우호적 협의 강조

청와대는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이라는 취지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이면 서도 전반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관련기사 7·14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글로벌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는 데다 선불리 움직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시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도 발 빠르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일정 부분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위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패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상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신중모드'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가 여럿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조사해 대응성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대미 투자 계획을 선불리 변경하려 시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적 조치를 하거나, 오랜 협상의 결실인 핵추진장수함·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이 깨질 우려도 없지 않다.
아울러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보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등 이미 확보한 조건을 지키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도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소각 의무 예외 사유로는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우ரி사주제도 실시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수급조절용 벼 재배 추가지원...쌀값 안정 총력

도, ha당 50만원...적정생산·소득안정·지역RPC 수익향상

전남도는 쌀값 정상화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월 말부터 전략작물 직불제 신규 품목인 '수급조절용 벼' 재배를 지원한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에 가공용으로 제한해 시장격리하고, 밥할 공급이 부족한 유사시 시장에 공급해 쌀값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수급 안전판' 역할을 한다.
최근 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까지 눈에 벼 대신 논콩 등 논타작물을 재배했던 농가들이 다시 벼 재배 회귀를 고민하고 있어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의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ha당 500만원의 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ha당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용 벼의 ha당 계약 물량은 조곡 158t 생산을 기정할 경우 △전략작물 직불금 500만원 △쌀 판매대금 546만원 △전남도 추가지원금 50만원을 더해 1096만원 수준으로 조곡 40kg 기준 6만 9000원 정도다.
계약물량의 추가로 생산되는 쌀은 농작업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향후에도 우선 참여권이 부여돼 장기적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2월 말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시군별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적극 활용해 참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RPC의 관리비 추가 매출 확보, 쌀 과잉생산 억제 등 1석 3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군·참여RPC와 함께 마을 단위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석면 피해자 21명 추가 인정...피해자 총 8758명

21명이 석면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면서 피해자 규모가 총 8758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2회 석면 분야 환경피해구

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21명을 피해자로 새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생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4명의 유족에게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강이 악화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피해자 10명의 피해 등급을 조정하고 인정 질환을 변경했다.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8578명이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누계 2483억5100만원이다.
연남뉴스

▶1면 '백년가게...'서 계속

이처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들조차 일감 절벽 앞에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휴·폐업으로 인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이 해제된 곳은 총 41곳에 달한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초기에는 폐업 사례가 드물었으나,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된 2021년 이후 폐업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제통계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폐업 사업자는 전년 대비 12.8% 증가

한 2만6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음식점과 소매업 등 내수 밀착형 업종의 타격이 큰데, 이는 백년가게 대다수가 분포한 업종과 일치한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백년소상공인' 정책이 홍보와 인종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년가게로 지정되면 인종 현판과 마케팅 지원을 받지만, 정작 폐업 위기에 몰린 가게를 살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나 임대료 대책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백년가게는 지역 상권의 상징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며 "단순히 오래된 가게를 인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경영 안정 자금과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